

# 코로나 시대 줄줄 새는 개인정보...당신은 안전한가요?

“경찰에 신고를 해야 하는 지 기분이 나빴어요. 방문자 명단에 적힌 개인정보를 유출할 경우 처벌 된다는데, 다른 곳에 적었던 제 정보들도 이런 방식으로 활용됐을 지 걱정이 들어요.”

직장인 김명진(31·광주시 서구 치평동)씨는 최근 기분 나쁜 경험을 했다. 지난 주말 잤는데 맥주 전문점에서 코로나19 방역수칙에 따라 방문자 명단을 작성했는데 불과 10분만에 해당 업소측이 보낸 홍보 메시지를 카카오톡으로 전송받았기 때문이다.

김씨는 깜짝 놀라 가게 주인에게 다가가 “손님들 번호를 일일이 저장하시나”고 물었는데, 사장님 당연한 듯 “예, 손님 관리용으로 저장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씨는 “코로나19 이후 개인정보가 무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우려와 걱정이 쏟아졌는데, 직접 경험해보니 매우 기분이 좋지 않다. 경찰에 고발 할까도 생각해 봤다”고 말했다.

코로나19로 인해 여기저기 남겨진 개인정보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확산 방지 차



호프집 방문 작성 10분 뒤 업소 홍보 문자 방문 기록 명단 쉽게 노출 등 관리 소홀

QR코드 포털사이트 계정 도용 불안감도 간 적도 없는데...검사 받으라며 전화와

개인 안심번호 홍보·인식 부족에 사용 저조 역학조사 이외 용도 사용 적극 단속을

원에서 추진중인 다양한 역학시스템에 대한 국민 사생활 침해 논란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방문자 수기 명부의 경우 누구나 쉽게 들여다볼 수 있는데다, 개인정보 유출·도용 사례까지 일러지면서 개인정보 관리에 대한 불안감을 호소하는 시민들이 늘고 있다.

2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방문자 수기 명부는 가급적 타인의 개인정보를 볼 수 없도록 조치해야 하며, 보관 후 4주가 지나면 파쇄하거나 안전한 곳에서 소각해야 한다.

또 역학조사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

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현장에서는 개인정보 집해의 심각성을 전혀 체감하지 못하는 분위기다. 공개된 장소에 비치해 누구나 알기 쉽도록 관리하는가 하면, 업주도 전혀 관리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방역당국도 손님들의 개인정보를 제대로 보관하고 파쇄하는 지 살펴보는 지 관리할 업무조차 내지 못하고 있다. 시민들의 불안감을 키우는 이유다.

전자식(QR) 출입명부 관리도 부실하다. 역학조사별 미더던 방역당국이 엉뚱한 사람에게 코로나19 검사를 요구하는 등 전자식 출입명부 기입을 위한 포털사이트 개인정보가 사용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회사원 A(54·광주시 동구 지산동)씨의 경우 지난 27일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광주시 동구 한 코인노래방에 출입한 기록이 확인됐으니 보건소 검사를 받으라는 방역당국 전화를 받았다.

A씨는 그날 노래방을 간 적이 없는데도 해당 코인 노래방 출입한 QR코드가 찍혀 있다는 게 방역당국 설명이다.

A씨는 억울함을 호소했고 방역당국은 QR코드를 생성하는 포털사이트 계정이 도용당했을 가능성을 언급했다.

A씨는 “내 계정이 도용됐다든 불안감 뿐 아니라 확진자와 동선이 겹쳤던 진짜 인물을 찾지 못하게 되면 방역에 구멍이 생기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런 불안감을 해소한다는 취지로 도입된 개인 안심번호도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저조한 홍보와 업주들의 인식 부족 등이 한몫을 하고 있다.

개인안심번호는 지난달 19일부터 다중이용시설 방문 시 수기명부에 휴대전화 번호 대신 적을 수 있도록 했다. 개인안심번호는 숫자 4개와 한글 2글자로 이뤄진 고유번호로 QR체크인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개인안심번호 대신, 휴대전화 번호를 요구하는 현상이 대부분이다.

이날 오후 광주시 동구 한 음식점은 개인안심번호를 적으려는 손님에게 휴대전화번호를 요구하기도 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 8000원 빼앗은 강도 '징역 10년' 이유는

동일 범죄로 3차레 이상 징역형 누범기간 중 범행...중형 불가피

가게 주인을 흉기로 위협하고 8000원을 훔친 혐의로 붙잡힌 50대 남성에게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강도죄로 세 차례 이상의 징역형을 받은 자가 누범 기간 중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중형이 불가피했다. 재판부는 “안타깝지만 법원이 최대한 감경을 하더라도 10년”이라며 중형 배정을 설명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 13부(부장판사 심재현)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강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9)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강도 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해 10년간 전자발찌 부착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 5일 밤 10시 10분께 광주시 모마사지사에 침입, 흉기로 여주인과 여종업원을 위협해 손을 묶은 뒤 현금 8000원과 신용카드 등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면서 돈이 없어 생활비

를 마련하기 위해 벌인 범죄라는 게 검찰이 밝힌 범행 동기다.

A씨는 이미 강도 범죄로 3차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다, 지난 2019년 11월 출소한 이후 1년 여 만에 재차 강도 범행을 저지르면서 특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그가 강·절도범죄로 수감된 기간도 31년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특가법 제 5조 4항은 ‘강도 등으로 3회 이상의 징역형을 받은 자가 다시 죄를 범하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이같은 점을 들어 “빼앗은 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지만 누범 기간 중 지속하지 않고 범행을 반복,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또 “출소 뒤 경제적 압박감을 느끼자 별다른 죄의식 없이 범행을 반복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는 다시 쉽게 강도 범죄를 범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며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한 이유를 설명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미안마 민주화 지지 '세 손가락'

지난 27일 오전 광주 동구 5·18 민주광장에서 시민들이 미안마 민주화 시위를 지지하며 세 손가락을 들어 보이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사학 비리·부당 해임 지적 현수막 건 사회활동가 상대 손배소

## 법원 “허위 사실 단정 어렵다”...도연학원 패소

학교법인 도연학원이 사학비리와 부당해임을 지적하는 현수막을 게시한 20대 사회활동가에게 억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허위 사실이라고 단정 짓기 어렵고 관련 글을 게시한 주위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게 법원 판단이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민사11단독 윤명화 판사는 도연학원이 A(25)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학원측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시민기자로, 사회활동가이기도 하다. 도연학원은 A씨가 지난해 5월 14일 학교 정문 앞에 ‘부당한 해임 처분 철회하고, 해당 선생님께 사과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정진고 사학비리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것. -명진고 학생 일동-’이라는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 허위사실을 게시, 학교 명예를 훼손한다며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

했다. 해당 학원은 또 A씨를 명예훼손죄로 고소하기도 했지만 모두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다.

A씨는 도연학원 전 이사장의 교사 채용 과정에서 금품 요구 의혹 등을 제기했다가 해임된 교사에 대한 부당한 징계 철회를 요구하는 현수막을 게시했는데 학교측이 자신과 학교 재학생, 기자 등을 상대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자 정보통신망에 ‘사학비리 사건’, ‘스쿨미투’, ‘부당해임’, 학교 측이 소속 학생을 경찰에 고소할 일 등을 시리프로 올렸다.

도연학원 전 이사장은 지난 2017년 9월, 교사 채용 과정에서 5천만원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한 혐의(배임수재미수)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A씨가 국회 국정감사 자료와 언론 기사 등에 적시된 사실을 근거로 의혹을 제기한 점, 글을 게시한 주위 동기나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 구청 서류 놓고 구의원-행정부 ‘실랑이’

지역아동센터 폐쇄 자료 열람 갈등 구의원이 서류 그대로 들고 출행랑 지역민들 ‘의회·행정부 추태’ 지적

광주시 서구의회가 지난 23일 개최한 구정 질문에서 김옥수 서구의원과 구청 간부 공무원이 설전을 벌였다.

“서류를 뺏기 위해 몸싸움 직전까지 가 1층으로 피신했다”, “내부 검토자료를 가지고 가는 건 아니지 않느냐”는 언쟁이 구정 행정과 현안사항을 묻는 구정 질문 자리에서 보란 듯 구청 곳곳에 중계됐다.

서구가 지난해 단행한 A지역아동센터 폐쇄가 적법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다. 김 의원은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며 관련 자료를 요구해 열람하는 과정에서 보여주지 않으려는 공무원들과 ‘몸싸움 직전’까지 갔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7월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형을 선고받은 아동센터 원장과 관련, 해당 시설을 폐쇄한 서구 행정을 문제삼았다. 항소심 등이 남아있는데 1심 선고만으로 폐쇄한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을 지키지 않은 것 아니냐는 주장이었다. 서구청은 대법원 판례 등을 내세워 행정 처분의 경우 형법과 달리 지나치지 않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대법원 판례를 요구했고 공무원들은 내부 자료가 포함됐으니 관련 분야만 확인하라는 취지로 서류를 건넸는데 김 의원은 다른 내용까지 들여다보려고 하면서 몸싸움으로 이어진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김 의원은 다가서는 공무원들을 피해 의원실을 떠나 다른 의원실을 옮겨다니다 1층에서 둘러쳤다.

김 의원은 다음날 의회 본회의장에서 이날 일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며 “(서류를)뺏으세요” 하니까 납작된 두 명이 쫓아와서 가로막고 서류를 뺏으려

고 했다”고 지적했고 담당 간부공무원은 “검토자료를 가져가는 건 아니라고 했는데도 이 자리에서 언급하는 게 아니지 않느냐”며 맞섰다.

지역민들 사이에서는 구정질문의 취지를 무색하게 한 의회와 행정부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구정 행정 및 현안사항에 대한 심층 질의로 아동센터 내 학대 실태의 심각성과 촘촘한 관리 감독의 필요성, 상처받은 아이들에 대한 치료 대책 등을 찾기는 커녕, 서류 열람 문제로 말싸움을 벌이는 수준 낮은 행동으로 추태를 부렸다는 것이다.

시민단체 참여자치21 관계자는 “본회의 구정질문의 의회와 집행부가 사소한 감정싸움 하라고 있는 시점이 아니다”면서 “최근 기초의원과 집행부 공무원들 간의 갈등이 이곳 저곳에서 터져나오고 있다. 집행부와 의회는 서로 균형을 맞춰 구정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 법원 경매부동산의 매각 공고

1.매각물건의 표시 및 매각조건  
 <경매 3개> \*QR코드:법원경매정보 웹으로 접속됩니다.

사건번호	물건번호	매각물건	소재지 및 면적 [㎡]	용도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액	비고
2020타경 4394	1	목포시 동명로77, 나동 2층 208호 [상업용]	아파트	50,000,000	50,000,000		
2020타경 3339	1	영암군 금정면 월평리 629-13 346㎡ [농지]	대	74,875,000	74,875,000		
2020타경 4684	1	목포시 산정동 1080-380 178.8㎡ [목포시 산정동목포54번길 7-3 1층87.32㎡ 2층69.60㎡ 부속건물 창고 2.2㎡ 제외의 주택일부 11.1㎡]	대	137,652,320	137,652,320		

2.매각방법: 경매  
 3.매각절차: 2021. 4. 12. [월] 10:00  
 4.매각장소: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제101호 경매법정  
 5.매각방법: 경매

3.연립주택/다세대/빌라

사건번호	물건번호	매각물건	소재지 및 면적 [㎡]	용도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액	비고
2020타경 53747	1	무안군 삼향읍 향산리 산152-58 무안연립주택 3층 304호	101.52㎡	다세대	352,000,000	352,000,000	

사건번호	물건번호	매각물건	소재지 및 면적 [㎡]	용도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액	비고
2020타경 4080	1	무안군 일로읍 죽산리 1549 4644.5㎡ [매각]	답	566,629,000	566,629,000		
2020타경 53303	1	무안군 일로읍 광암리 459-2 318㎡	답	7,314,000	7,314,000		

● 공공된 부동산의 면적 표시는 실재와 다소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별매각조건  
 ① 농지법상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을 하는 최고가매수신청인이 매각결정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하지 아니함으로써 매각이 불가능한 경우 그 공표는 그 이후 해당 부동산의 매각절차에서는 우선 매수권을 행사할 수 없다. 따라서 당해 기일에 다른 매수신청인이 없는 경우 최저매각가액을 공표후부터 매수신청인으로 본다.  
 2. 매각기일: 2021. 4. 12. [월] 10:00  
 3. 매각절차: 2021. 4. 19. [월] 14:00  
 4. 매각장소: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제101호 경매법정  
 5. 매각방법: 경매  
 ③ 입찰방법에 비하여 기일입찰에 사건번호, 입찰자의 성명, 주소, 입찰가격, 보증금액 등을 기재하고 날인하여 보증금을 함께 입찰봉투에 넣어 입찰함에 투입하면 된다. 매수신청은 발표일로부터 1월(10일연장)에 해당하는 공표기일 발행의 자기앞수표 또는 현금으로 준비하거나 지급보증서(보증금)를 제출한 문서(입찰 보증서)를 준비하여 한다.  
 ④ 다른 인원이 공동으로 입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동입찰자격에 각자의 지분을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③ 입찰봉투의 투입이 완료되면 곧바로 개봉을 실시하여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을 최고가매수신청인으로 결정하고,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입찰자들만을 상대로 추가입찰을 실시한다.  
 ④ 최고가매수신청인과 차순위매수신청인을 제외한 다른 매수신청인들은 입찰보증금에 입찰결과가 확정되는 즉시 반환한다.  
 6. 매각허가 및 대금납부  
 ①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에게 매각결정기일에 매각허가 여부를 확정적으로 결정하고, 매각결과가 확정되면 대금지급기한이 매각당첨금 납부하여야 한다. 대금지급기한은 중상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로 지정한다.  
 ② 지정된 대금지급기한이 매각당첨금 납부하지 아니하면 재매각을 실시한다. 다만, 재매각일 또는 매각된 날의 3개월까지 매각 당첨금이 매각당첨금 및 지연이자, 비용을 납부하면 대금납부로서 유효하며, 미납시 재매각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7. 소유권이전 및 인도  
 ① 매각당첨을 납부함으로써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되며, 각종 부담, 기입부담은 순위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소멸된다. 소유권이전등기 및 지대권이나 기입부의 말소등기를 위해서는 등본제외 지방자치단체를 방문한 후 등본제외수출확인서 및 등본제외수출통지서를 첨부하고, 국민주택재판정판결번호 기재한 신청서를 방문하여 제출하면 법원이 위 등기를 축적하여 준다.  
 ② 매각당첨금 납부후 30일 이내로 입찰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선분금과 도장을 가지고 오시기 바라며, 당인의 대리인으로 입찰하고 하는 사람은 입찰보증금 전부를 위임장을 반드시 입찰결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소유권이전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요구되는 농지의 경우에는 최고가매수신청인으로 결정된 후 매각결정기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여야 매각이 허가된다. 단, 농지이용계획확인서 등에 의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불필요하지 않음에 상당한 경우에는 매각이 허가될 수 있다.  
 ④ 공공된 물건은 매각기일 전에 관공신청이 취하되거나 집행이 취소, 경지권 경우, 또는 매각기일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도의 공고 없이 입찰에서 제외된다.  
 ⑤ 신청에 관계없이 물건은 최종의 매각기일에 해당되면, 속행사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신청공고를 하지 않으므로 우리법원 게시판의 공고나 법원에 비치된 매각결과명세서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⑥ 매각당첨을 납부하지 아니한 채로 매각당첨금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때에는 매수신청인이 제출한 매수신청보증금을 반환합니다.  
 ⑦ 매각결과 공고의 요지는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주소: http://www.courtaction.go.kr [법원공고] - 법원행정처법선언  
 \*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공고내용의 열람 가능한 정보는 법률정보 제공서비스에 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것을 국민편의를 위하여 따로 제공한 것으로서, 즉시 그 중의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다면도 이를 이유로 매각결과가 상환되어도, 대법원법선언이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으므로, 관공되는 물건에 관하여 반드시 법원에 대해서도 게시된 매각결과와 공고나 법원 매각결과명세서 등을 꼭 확인하십시오. 입찰하지 않습니다.  
 2021. 3. 2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사법보좌관 공정배